

지방신문협회,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과 문제점' 등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는 광주일보사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역신문사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광원일보 박승선 기자

“수도권 집중이 되레 경쟁력 저하”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이 21일 주최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 발전 정책 등의 문제점을 꼬집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중 현상은 심화> 이날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의 일관성 부족으로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됐다”며 그 예로 ▲2004년 2월 성장관리지역 내 첨단산업 공장 증설을 100%까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원 지역의 삼성 전자 증설 가능 ▲2005년 5월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미국의 3M, 일본의 NEC 등 8개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 ▲2006년 4월에는 자연보전지역에 대해 실질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개발 규모 상한을 종전의 10만㎡에서 50만㎡로 확대 ▲뉴타운 사업 등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서울시 안에서 대

과밀·혼잡·높은 땅값 규제 완화 폐해 심각

광역경제권도 내부 통합 어려워 비현실적

학이전을 허용 ▲2006년 12월 성장관리지역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 LG전자·팬택·한미약품·일동제약 등 4개 대기업의 증설을 허용 등을 들었다. 변 교수는 이어 이 같은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1960년 20%에서 2006년 48.5%로 늘었고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2천개의 93.4%인 91만7천 개가 수도권에서만 늘었을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순유입 된 인구는 51만 7천749명이나 됐으며 출생아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중도가 나타났다면 수도권 규제가 없었다면 수도권 개발과 기능의 집중은 더욱 심화됐다”며 수도권 규제를 철폐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경쟁력 저하 = 변창흠 세종대 교수와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수도권의 집중은 지방과의 격차의 문제이기 전에 수도권 자체로서 국제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 고지가 등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 수도권·지방 공멸 현상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중 아시아에서 수도권에 별도의 본부를 두고 있는 49개 다국적 기업 가운데 서울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으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은 세계 315개 도시 중 41위를 차지하여 홍콩 3위, 도쿄 5위, 싱가포르 6위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

계적인 다국적 기업 인사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사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215개 조사대상 도시 중 8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위원 등 토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현 정부 지방정책의 문제점 =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전략은 참여정부의 통합적·단계적 균형발전정책에 비해 낫다고 할 수 없으며 설혹 낫다 하더라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임기 말쯤에야 집행될 수 있어, 새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광역경제권이 단순한 권역 구분 이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공간단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응집성과 통합성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이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 여건이나 제시된 정책수단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민약 실효성이 있는 공간단위로 기능하면, 국토 계획방상의 권역이나 행정 권역과의 불일치 혹은 마찰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고 1,500억원 투입 2010년 개교 첫해 100명 모집... R&D특구 청신호

광주과기원 학부 신설 의미·전망

광주과학기술원의 학부신설 결정으로 '첨단과학도시' 광주를 이끌어 온 광주과기원(GIST)이 설립 15년 만에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학부신설은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을 위한 조건을 보다 확실하게 충족시키면서 유능한 과학인재의 지역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학인재 양성만으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는 이들 인재를 활용할 산업 기반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광주과기원 학부 어떻게 설립되나 = 학부과정 개설을 위해서 모두 1천500억원의 국고가 투입돼 6만여㎡ 부지에 3만㎡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매년 84억원의 운영비가 국비 지원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부생은 학년당 100명씩 모두 400명으로 구성되며 교수진은 40명으로 오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학부 개설 작업이 추진된다.

학부과정은 특별전형 중심으로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뒤 3, 4학년 때부터 전공과정을 공부하는 통합학과과정으로 운영되는 등 연구중심 대학으로 특화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2010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시설 등이 완공되는 데 걸리는 시한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빨리 지원하느냐에 2010년 학부 개설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광주 R&D특구 지정 탄력 = 광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첨단과학산업 단지 'R&D특구' 지정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구지정의 필수요건인 교육 인프라와 관련, 기존 남부대학교, 전남대 산학 맞춤형 교육연구센터 등 모두 4개 이공계 대학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 과기원 학부에서 배출된 인력이 광주 R&D특구에서 연구·기

술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과학 기술산업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첨단과학산업이 R&D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천740억원을 들여 국제비즈니스 파크 등 첨단 기술 인프라를 깔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명실상부한 견인차로 육성된다. <지역 반응 = 광주상공회의소 이 후형 상공진흥부 과장은 “지역의 과학 영재가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로 빠져나가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오는 예가 거의 없어 안타까웠다”며 “학사과정 설립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이공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발전연구원 문환규 기획연구실장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학사과정 신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인재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설립형 교무연구처장은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이 우리 대학 공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 하도록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역 대학 견제·국회의원들도 무관심

과기원법 왜 지연됐나

광주과학기술원에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이 지난 2004년 11월에 당시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무려 3년6개월 동안의 표류 끝에 17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17대 국회 초반에 발의된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 표류한 것은 우선 정부의 의지 부족과 전남대와 조선대 등의 견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한국 과기원(KIST)과 대전지역 의원들의 반대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광주시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점차 확장되고 참여정부에서 광주 R&D 특구 지정에 나서면서 광주 과기원의 학부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기원위 소속이었던 염동연 의원과 광주과기원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광산구) 등이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을 가졌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과기원위 통과가 추진됐지만 실패하는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소관 상임

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기원법 개정안 통과와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대전·충청권 의원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무산되면서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의 김동철 의원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법과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연계하는 한나라-민주당 공조체제를 구축, 결국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만들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3 호남예술제. 전국의 종합예술제전·전국대회. 미술·작문·논술대회. 대회요강(공표). 주최: 광주광역시. 후원: POSCO, 남부대학교, 광주일보사. 문의: 062-271-1111